

거리두기 해제 유예했지만...인수위와 보조 맞추는 방역당국

확진자 대면진료 병원 확대...수가 신설 연 4회 1만명 대상 항체조사 실시기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제시한 7대 방역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다만 인수위가 요구한 영업시간 제한 폐지는 2주 정도 유예됐다.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경영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여당 및 인수위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정부와 방역 당국의 발표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약 열흘간 코로나특위의 7대 방역 권고안 중 4가지 안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2일 코로나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 정부에 7가지 방역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안에는 ▲확진자 대면진료 전환 ▲고위험군 검사·진료 '패스트트랙'(fast track) ▲확진자·백신 데이터 공개 ▲정기적인 국민 항체

조사 ▲5~11세 소아 기초접종 자율 원칙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등 먹는 치료제(경구용 치료제) 다량 확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이 담겼다.

5~11세 소아 기초접종은 고위험군 소아만 권고 대상이며 건강한 어린이는 자율 접종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가지는 제외한 방역조치가 대부분 새 정부 기조로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빨랐던 조치는 재택치료를 대면진료 확대안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동네 병·의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30일부터 피부과나 한의원 등 비코로나 진료를 담당하는 병·의원이 확진자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치료가 외래진료센터는 지난달 30~31일 191개 병원이 새로 신청해 487개소로 늘었다. 의원급은 오는

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대면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병·의원에 기존 진찰료에 더해 2만4000~3만1000원의 대면진료관리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대대적인 항체양성을 정기조사도 수용했다. 방대본은 지난달 30일 전 국민 대상으로 1년에 분기별로 4번 전국 1만명 대상으로 항체양성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장 이달부터 6월까지 2분기부터 조사를 할 방침이다.

당초 수도권이나 대구·경북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군 입영장병, 헌혈자를 표본으로 소규모 항체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소아·청소년까지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방대본 측은 "대표표본설계, 참여자 모집 방안 등 전문가의견을 거쳐 4월 중순께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백신 데이터 공개와 관련해서도 방역 당국은 내부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 중 어떤 자료를 언제 공개할 것인지 논의하겠

다는 뜻을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접촉 후 이상반응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백신 부작용(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포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확보 물량을 20만명분 더 늘리고 도입 시기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화이자사의 파스로비드와 머크(MSD)사의 라게브리오 등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한 상태였으나 지난 25일 20만명분을 추가 구매계약해 120만4000명분으로 늘었다. 이 중 96만2000명분은 파스로비드, 24만2000명분은 라게브리오다.

지난 1월1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처방된 먹는 치료제는 15만2431명분이다.

먹는 치료제 복제약 국내 생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1일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파스로비드,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내 기업의 복제약 생산·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한미약품, 셀트리온, 동

방에프티엘이 복제약 서브라이센스를 취득한 상태다.동네 병·의원에서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진료를 우선 실시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다. 다만 이 권고안도 새 정부가 들어서는 다음달 이전에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과 인수위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는 당초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기획재정부와 재원 마련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방역 권고안과는 별개로 인수위 측이 요구한 영업시간 제한 철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8인에서 10인으로, 영업시간은 기존 11시에서 자정으로 소폭 완화했다. 정부는 2주간 감소세와 위중증·사망 추이 등을 살핀 후 오는 18일 이후 마스크를 제외한 대부분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백남진 기자



오늘부터 10명·12시 완화된 거리두기 시행
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10명·12시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하루 전인 3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거리두

법원, '경찰 폭행' 장용준 이번 주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27분 간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가격 혐의

장용준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의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형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공판을 오는 8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노엘(활동명)로 활동하기 전부터 아버지(장 비서실장)의 아들로, 인터넷에 아버지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목으로 느끼는 트라우마를 가진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러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후에도 의지와 달리 신분이 파헤쳐져서 크고 작은 돌을 맞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게 됐고, 자기방어적인 태도와 불량한 태도를 일삼았다. 또 술을 막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최후진술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형법상 상해라고 부를 정도에 이르지 않

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뒷수갑이 채워지지 않았고, 장씨가 뒤통을 맞고, 경찰관과 부딪힌 것 뿐이라는 것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동안 네 차례 불응한 혐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하면서, 특히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하세요, XX년아"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이 재생됐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나와 "(장씨의 가격) 고의적이라 생각한다" 등의 증언도 했다.

장씨는 2020년 6월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이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의 양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씨가 2020년 사고 때는 집행유예로 구

속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이다.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집행유예도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학설 중에는 실형만을 의미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판례는 집행유예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이 조항에 대해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의 시점에 미쳐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아 남아있는 경우에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판례 변경은 없었다.

이 법리를 장씨 사건에 적용할 경우 1심 판결 선고일인 오는 8일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장씨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열린다면 집행유예에 선고가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2심 선고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게 된다.

서선욱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